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최동호

대통령과 채마밭 늙은이

치열한 선거전 끝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 새로운 대통령당선자가 결정되었다. 최근 한국의 모든 관심은 당선인의 인사에 모아져 있다. 당선하는 것도 지난한 일이지만 그 다음 적정한 인물을 발탁하여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더욱 지난한 일이다.

인수위원회나 일부 인선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도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에 대해 사퇴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당선인은 전문가를 등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인사가 그렇게 진행될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공자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공자의 제자 번지가 공자에게 농사일과 채소 기르는 일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답했다. "나는 농사일에는 늙은 농부만 못하고 채소 기르는 일에는 채마밭 늙은 농부만 못하다"

공자는 제례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물어서 법도를 찾아 처리했다. 공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사일이나 채마밭은 가꾸는 일이 아니다. 공자는 군자는 군자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한다고 했다. 공자가 농사일에 간섭하거나 이를 아는 체하고 처리했다면 공자가 아니다. 농사일은 농사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요새 말로 하자면 전문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수많은 전문가의 활동이 밑받침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 곳곳에 훌륭한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었고, 이 분들이 각 분야를 선도해 오늘의 눈부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없어서 또는 전문가가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국가적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며, 기술대국이다. 이제는 전문가를 등용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등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느 한 편에선 극단의 인물만을 등용한다면 다른 쪽의 국가적 인재는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만큼 국가발전은 일방통행을 지향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코드인사의 편 가르기나 이명박 정부에서의 극단적 소통의 부재는 모두 인재의 등용에 있어서 한 편에 치우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대통합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화합과 탕평의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선조를 망친 것은 사색당쟁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1724년 복잡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등극한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대립을 치유하기 위해 탕평책을 시행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아들이자 세자였던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변을 치르게 된다.

이는 당쟁을 주도하는 정치세력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야기된 조선조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정치세력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대파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대화합이나 탕평의 정치란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하기 힘든 과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 중의 하나가 탕평의 정치이며, 중도정치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극단의 편가르기에 앞장선 인사의 등용이 아니라 정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중용하는 탕평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실현하기 힘든 일이다. 초야에 묻혀 있는 제갈공명을 등용하기 위해 유비 현덕이 세 번이나 그 초옥을 방문하여 함께 일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음미하고 되새겨 볼만한 고사이다.

대선 후 가까이 몰려드는 인사들의 경우 대개 출세의 발판으로 요직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정말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권력의 이동을 뒤쫓는 철새들의 무리가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들이 도처에서 국가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재의 발굴과 등용이 새 정부의 가장 화급한 과제이다.

농사일은 늙은 농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공자의 말은 지나간 옛말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그리고 2월 말 들어설 정부의 새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언이다.

5년 후 탕평의 정치에 실패한 불행한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가 발전에 기여한 명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탕평의 인사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교사로서 지난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시인·고려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의원 연금 폐지 공약 말잔치로 끝나다니

새해 벽두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 잇달아 치러지면서 여야가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의원 연금 폐지 등 특권 포기 공약이 말 잔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처럼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해도 드물다. 지난해 6월 9일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및 겸직 금지 등 6대 쇄신안을 발표하며 국민에게 다가섰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당도 2주 후 비슷한 내용의 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야의 호들갑은 한낮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정초 새벽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 의원 연금 관련 헌정회 예산 128억 원이 그대로 살아남은 것이다. 국회의원 연금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은 단 하루만 활동해도 6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권능을 잇속 챙기기에 동원한 최악의 사례다.

월 수령금 120만 원도 터무니없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이 매달 30만 원씩 30년을 적립해야 하는 규모다. 비난이 일자 새누리당은 연금 지급 대상범위를 '현재의 수령자'로 묶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유사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따라 대선기간 언론들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폐지될 것이라고 단정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쪽지'를 들이밀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했던 의원들은 정작 자기 희생에는 한없이 관대했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 등 여야의 쇄신 다짐은 결코 공염불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 쇄신과 선진화가 당면의 화두가 아닌가. 말 잔치로 끝나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해에도 여전히 우려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새해에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폭력의 주범인 '일진'도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니 우려가 크다.

실제로,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6)군은 최근 PC방에서 선배의 이용 요금을 대신 결제했다고 한다. 갑자기 전화를 받고 찾아갔는데 "돈이 없으니 대신 계산해달라"는 학교 일진 선배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A군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교 내 일진들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일진까지 생겨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폭행 및 갈취, 집단 따돌림 등에서 최근에는 욕설, 따돌림, 은밀한 협박 등 간접폭력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 광주지역 62개 중·고등학교 270여 명의 학생들을 '일진'으로 분류해 집중관리에 나서면서 모두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일진과 폭력서클이 발견되면 형사 입건하거나 탈퇴서약까지 받아내 음성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제거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진들 사이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303건에 달한다는 게 이의 방증이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예방교육을 강화하되, 이제는 간접폭력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또 117 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내실화하고 교사, 학부모 역시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기고

자살, 그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자

박석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비명이 자주 들린다. 그제는 누가 자살하였고, 어제는 또 누가 자살하고, 오늘도 역시 누가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상이 슬퍼지고 있다.

어찌하여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빈번해지면서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해주는지 모를 일이다.

나라가 망해서 비탄에 빠진 애국지사들이 자결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의 침략을 받아 망해가는 나라가 서러워서 애국심으로 죽어가는 지사들도 아닌 마당에, 삶이 팍팍하고,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한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압제와 탄압에 시달리고, 최악의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래도 정권이라도 바뀌면 일루의 희망이라도 보이지 않겠느냐면서, 참고 참아 왔지만, 정권교체가 실패로 돌아가고 현 정권이 연장된다는 절망감에서 끝내 목숨을 끊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죽음, 우선 그분들의 자결에 삼가 명복을 빌고 빈다.

마찬가지로 시민운동 지도자의 죽음에도 삼가 애도의 뜻을 밝히며 그분의 명복을 빌어 마지않는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쓰리며 속이 탔다면,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을 끊어서까지 자신의 한을 풀고자 했다는 것인가.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쓰리다.

MB정권의 노동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실의에 빠졌던 그 많은 노동자,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 정리해고라는 명분으로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직장을 잃고 생계 걱정으로 신음하고 고생을 했는데, 정권의 연장으로 희망을 엿볼 기력마저 없어졌으니 그들이 무슨 힘으로 버틸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고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일도 결코 좌시할 일만은 아니다.

하나뿐인 생명, 하늘이 주신 목숨을 어떻게 감히 자살이라는 수단으로 죽음을 택한단 말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아무리 동정을 한다 해도, 죽음을 무릎 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지, 죽는다고 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면 영원한 끝이 아닌가.

잘못된 노동정책에 대한 원한, 대기업에 대한 증오, 노동운동에 대한 작위적인 방해와 노동조합에 대한 의도적인 분열 등, 절망과 좌절의 고통을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한다고 해도, 죽음을 택한 것만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겠노라던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살아있고,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이 아직 식지도 않은 시간이니, 조금은 참으면서 희망과 꿈에 기대를 걸어라도 봐야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행위로 삶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고 죽어간 그들에게 무엇을 탓하며, 그들의 비통한 죽음에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겠는가.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책무를 맡은 사람은 대통령 당선인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

분쟁이 종식되지 않았거나, 노동자와 대치하고 있는 대기업의 현장을 파악하여, 그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죽음을 택하지 않고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노동정책의 변화를 예고해주어야만 한다. 해고노동자들의 원대복귀나 비정규직의 근본적 대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날 조치를 해줘야 한다.

불이 나면 우선 불을 끄는 일이 소방관들의 임무가 아닌가. 국가의 통치를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면, 취할 수 있는 온갖 조치를 동원하여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

5년 동안 해야 할 통치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는 일의 전초전이 바로 이 문제에 있다.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충동에서 벗어날 특단의 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바로 미래 5년을 내다보는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데 대한 실망을 꼭 변화가 오리라는 희망으로 돌려주는 일이 바로 당선인이 해야 할 초미의 급선무다.

정권이란 유한한 것이지만 인간의 생명이 우주의 영원한 중심적인 가치임을 증명해주기 위하여 유한한 정권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사람이 통치자다. 통치자라면 우선 노동자들이 더는 죽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無等鼓

행복한 새해

지난해 매경이코노미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마크로밀코리아가 한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은 자신의 행복한 정도를 10점 만점에 5.99점(60점)으로 평가했다.

행복감을 느끼는 원천으로는 가족을 꼽았다. 세대별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30세 미만 '긍정적 마음가짐', 30세부터 49세까지 중·장년층은 '화목한 가족관계', 50세 이후는 '건강'이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의 행복점수가 70점 안팎인 걸 비교하면 한국사회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는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가지 기준에 맞춰 줄을 세우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박탈감을 느끼는 습관'을 꼽았다.

따라서 한국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누구가 가질 수 없는 '돈'이 아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행복한 가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보라고 주문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 학교 진로교육 지표조사'에서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의 52.5%가 돈을 선택했다. .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도 '돈'은 최고의 가치다. 으레 꿈을 말하라면 '유명한 과학자'라고 말하는 얘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것을 돈과 연결 짓는 '병든 사회'의 모습이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행복은 결코 내가 잡을 수 없는 파랑새'가 아니고 '누구든 손안에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내 손 안에 잡아두기 위해 조금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인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가 말하듯이 "행복은 일에서의 성공, 일확천금, 권력이나 명성처럼 거창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과의 스킨십,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한다. 계사년 한해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묻지마 성형 "NO"

이상혁

겨울 방학이면 으레 성형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오는 이들이 증가한다.

주로 코나 눈을 고치고 싶다며 상담을 하러 오거나 아예 의사의 진단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수술을 작정하고 방문한 경우도 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고치고 보자는 식으로 상담을 하거나 의사의 조언은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도 너무 많다. 솔직히 의사로서는 환자의 요구대로 수술만 잘 해주면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좋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환자에게 수술하지 말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 많지는 않지만 수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쁜 경우, 수술을 해봐야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콤플렉스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 수술을 원한다. 이에 반해 성형 전문의들은 단순히 코나 눈 등 특정 부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는 물론 얼굴 전체의 美적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견이 다를 때가 많다.

즉,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코를 오똑하게 고치거나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두 예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얼굴 균형을 깨뜨려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부자연스러움을 고치기 위해 다른 부위까지 손대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1차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수술을 해주고, 수술 후 고객이 다른 곳까지 수술하기를 원하면 또다시 해주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잦은 수술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상처나 흉터가 있거나 사고로 인해 인상이 변형됐거나, 애초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이 험악해보이거나 사회생활에 지장받을 정도의 외모라면 한번쯤 수술을 권유하고 싶다. 물론 인상이 좋거나 뛰어난 외모일지라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수술을 해도 괜찮을 듯싶다.

어떤 의사든 수술을 하기 위해 내원한 사람에게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다. 실력이 떨어져 어려운 수술은 하지 않는다는 식의 근거없는 헛소문이 날수도 있는 탓이다. 의사 입장에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효과가 똑같을 것으로 예상되면 솔직히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 같이 의사가 수술 효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환자는 수술이 정말로 필요한지 다시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은 의사가 먼저 자신의 입으로 환자에게 "수술해 봐야 소용없습니다"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성형을 위해서는 전문의로부터 자신의 얼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수술 가능 및 효과 정도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SM美성형외과 원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